

취업사실 숨겼다가 IP 덩미...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적발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대지급금 받는 등 취업 중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 추가 징수액 포함 36억 반환명령...하반기 점검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380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지급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하고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를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고용부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사업장 근무 기간을 대조한 결과, 이 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3억4000만원이었다.

이 중 한 근로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대한 대지급금 900만원을 받는 등 일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2020년 7월 실직한 것처럼 속여 6회에 걸쳐 실업급여 600만원을 타냈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올해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IP 주소 분석 결과, 취업 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는 취업한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 컴퓨터로 실업 인정을 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IP가 중복되면서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 2021년 3월 실업 신고한 한 근로자는 그해 4월 취업했다. 하지만 사업주와 짜고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회사 컴퓨터로 고용보험 신청을 했고, 9월에 걸쳐 실업급여 1500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결국 IP 문제에서 꼬리를 잡혔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에 대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외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 처리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하고, 실업

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대리 신청 여부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부는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 등을 포함해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수능 코 앞으로, 정성스런 기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불자가 기도하고 있다.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언제부터?...“이르면 내후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휴직 ‘자동 개시’ 방안 검토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 대체율 인상, 자동 개시 도입 등 제도 개선 손질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제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이다. 김부위원장은 “육아 휴직제를 못 쓰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는 점과 낮은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이다. 두 개를 한번에 손 보려고 한다”며 “다만 재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방안도 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2021년(11만 555명)보다 18.6% 증가했다. 이중 남성은 3만 7885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8.9%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해외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OECD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다. 이같이 저조한 사용률은 낮은 소득대체율, 기업 규모, 직장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 문화와 규모에 따라 육아휴

직을 써서 퇴사를 권고 받거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뿐더러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으로 받는 급여가 낮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7번째다. 정부는 실효성이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위해 ‘자동 개시’ 도입과 낮은 육아 휴직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저고위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자동 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해외에서는 육아 휴직 자동개시 등의 규정을 명시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충족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현행 육아휴직 한달 급여는 최대 150만원까지 설정돼 있는데, 정부는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확보가 관건이다. 육아 휴직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3조원 넘게 적자인 상

황이다. 저고위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8월에 확정된 상태인 데다,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장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을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내년 초까지는 안을 확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후년부터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우려도 있어서 잘 반영해서 세심하게 (안을) 만들려고 한다. 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으니, 연말까지 최대한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확정된 발표는 내년 초나 상반기에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재원 마련 관련 논의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에서 “현재의 큰 틀을 급격하게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5조의 국고 부담의 비율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활성화돼 있는 국가와 같이 일반회계의 부담 비율을 높여 근로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주부, 학생, 실재 아동의 양육을 전담하는 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권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